

한동훈·이재명 “의료공백 해소·민생 우선” 한목소리

여야 첫 대표회담 “함께 해법 찾자”
한 “국민불안감 해소, 정치의 임무”
이 “이해집단간 양해·타협 꼭 필요”
채상병 특검·25만원법 등은 신경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의료 공백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 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치적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핵심 의제로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또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강조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

금 살포’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적정선에서 대화로 타협하면 좋겠다”며 “굳이 차별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정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보다 대통령 소추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영광군수 재선거 ‘3인 경선’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당내 경선 후보가 4명에서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 당내 경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장현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사퇴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경선 후보로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가나다 순)을 확정 공고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6명의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나 1명이 1차 탈락(컷오프)하고 27일 최고위에서 추가로 1명을 컷오프하면서 4명으로 압축됐다.

당 경선은 이날부터 3일까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이뤄진다.

안도걸 “생산·소비 동반 하락… 경기하강 우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125분 동안 강변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통계로 나타난 것은 소비와 생산의 동반 침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며 “7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7로 전월 대비 0.4% 감소하고, 소매판매(△1.7%)와 건설기성(△1.7%)도 동반 하락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1포인트(p) 하락하며 3월부터 5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왼쪽부터),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중앙선관위 제공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 방식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민주당 영광군수 선거 대책위원장은 5선의 박지원 의원이 맡아 지휘한다.

선거일정은 오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0월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월10~11일, 본투표는 10월16일 이뤄진다.

오지현 기자·영광=김도윤 기자



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는 최근 정부의 경기 판단(8월 경제동향)과는 크게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출과 경제회복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생산 감소가 거시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내수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기하락세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수부양 조치에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2대 첫 정기국회… 여야 정국 주도권 경쟁 본격화

채상병 특검-연금개혁 대결 방송법 등 재표결 법안 대치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지난달 1박2일 연천회와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1일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험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정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해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당내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로,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165개를 추렸다.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던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대신 법안을 발의해 대야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함께 추천 방식 등을 논의 중인데, 한 대표안을 반영해 9월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은 오는 26일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 정쟁 법안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두고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文 피의자 적시, 국면전환 정치보복병”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저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정박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

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 다 큰 성인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 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꾀변을 씌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지나”며 “전임 대통령을 망신 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지

냐”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청와대·정부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도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수사 선상에 올리 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은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